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급”

윤정훈 도의원, “산단 유해물질 차단시설 의무화 8년, 도내 설치율은 6.6% 설치비용 70%가 국비 지원사업… 도비 매칭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북 도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은 8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대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외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저류 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이



하루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이 1일 50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는 반드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시행됐지만, 전라북도도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율이 10%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15곳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고작 1개에 불과하다. 현재 설치 진행 중인

4곳을 포함한다 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곳(66.6%)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 없이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정훈 의원은 “산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 하루 생태가 붕괴할 수 있다”며 “입주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불의의 사고로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방어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개 중 6개는 도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한 군산과 익산지역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의 45건 중 30건이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은 이미 조성된 산단 내에서 용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설치 비용 70%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의 패능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삼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를 앞둔 만큼 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완충저류시설을 적기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과 익산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했고, 취급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도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필코 생취하자”

김정수 도의원 “지금의 새만금 희망고문 전북의 미래세대에게 분명한 기회” 주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8일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의 미래세대에게 희망이자 기회가 될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의원은 “새만금 쟁점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전북도로 돌렸고 24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의 78%를 삭감하며 18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38명의 도의원이 함께 고성과 외로움을 견디며, 단체 삭발,

릴레이 단식 및 마라톤 투쟁에 나섰고 지난 7일에는 국회에서 5천여 명의 범도민이 국회에 집결해 전북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새만금은 희망고문이자 아픈 손가락이지만, 전북의 미래 세대에게 분명한 희망이자 기회”라며 “새만금 사업이 본래대로 오르기까지 이를 잘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오늘의 전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투쟁은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함께 행동하며 기필코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켜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 사업 정상화 총괄기대회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괄기대회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대회는 전북도민, 각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 5,0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을 규탄하고, 예산 복원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새만금은 국가사업으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새만금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목청을 높였다.

김영일 의장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의미한다”라며 “하루 빨리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새만금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을 헌법적으로 중단하고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9월 4일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 규탄 및 전북 쪽이 중단 촉구 기자회견 △9월 8일 군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9월 19일 새만금 예산삭감 규탄 범시민 집회와 삭발투쟁 전개하는 등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에 적극 협력을”

나인권 도의원 “새만금 사업 추진, 인접 시군 공동발전 위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특위 구성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더불어민주당)이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지난 2010년 원공된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데 무려 10여 년이 걸렸고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나 의원은 “현재까지 관할 구역이 결정된 8개 가운데 지자체 간 이견이 없었던 곳은 4건뿐으로 이대로라



면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돼 행정적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관할권 문제도 걸림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월 도의회에서는 새만금 인근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특별

자치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새만금특별지자체간 협력은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에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예산 복원을 위해 새만금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조건이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인권 의원은 “500만 도민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금의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새만금특별지자체간 협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국회 앞에서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남원시의회(의장 전경기) 의원들이 국회 앞 집회를 열고 남원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설립 촉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역 및 필수 의료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2018년 당·정·청이 합의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한 한바디 말도 없이 “지역 국립대 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확충 전략에 대해 서만 언급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남원 시민들과 함께 상경 국회 삭발 집회 이후 재차 남원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설립 촉구를 위해 이날 7일 국회 앞 상경 시위를 펼쳤다.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전북과 남원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로 당초 당·정·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라며, “의료 취약지역인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10명의 시 의원들은 지난 6일부터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전인 15일까지 남원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설립 촉구를 위한 국회 앞 1인 피켓 시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림피스킨병 적극 방역·공중화장실 안전대책 마련해야”

장연국 도의원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제40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림피스킨병 적극 방역과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은 전북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림피스킨병 대응에 대해 “도내 전체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을 100% 완료했고, 다른 지역과 달리 도내 수의사를 일제 동원했다”고 일련 공중평가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의 잠복기가 최대 28일이라는 점, △백신 접종 효과 감소가 나타나는 점, △3주가 소요된다는 점, △새로 태어나는 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 △매해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확보 방안과 시기별 정기적 차단방역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림피스킨병 대응에 관한 주안점을 지적하였다.



한 차례도 없었다”고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그는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적극 개회하고 전북도의 현실에 맞는 강력한 차단방역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관련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화장실 신속 및 개보수의 경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및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의원은 “전북도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해 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최첨단 IoT기술이 활용된 여성안심화장실의 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사회적 경제·농업 활성화 지원 늘려야”

전용태 도의원 “경제성 목적으로 하는 분야 아냐… 지원 필요” 전북도 차원 중장기적 계획 수립·전문가 양성 대책 등 주문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전북도의 세입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북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용태 의원(진안)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국가 지원이 축소됐다”며 경기침체가 심화는 상황에서 타계에 더욱 관심을 촉구해 나갔다.

전용태 의원은 “대폭 삭감된 사회적 경제 관련 국가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내년 예산안에 약 4억 원가량의 지원액을 편성한 점은 다행이지만 사회적 농업의 경우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모두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지원이 없다면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실제 올해 도내 2곳의 농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기간 만료로 사회적 농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유지해 주는 중추적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성과 측정이 어려워 시각적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기에 도가 나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용태 의원은 전북도에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대책”을 주문했다.

전용태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지원을 증가는 지방사회와 전북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원상회복 조치하라”

오은미 도의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도의회, 결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전라북도도는 도 2,038억 원을 비롯해 전주 817억 원, 군산 887억 원, 익산 878억 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 총 1조 382억 원이 삭감됐다.

“2023년 전라북도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1.5% 많게는 56.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감축, 사업축소를 강제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필자도 국회도 무시하고 세입 결산의 피해를 지방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추경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재정 비상사태를 지방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제 발행을 포함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부자감세 특히 법인세와 중부세 감세를 철회하고 세수부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방재정 비상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한 재경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지방교부세 삭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가 8일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